



vol.54

2025. 4. 21

ISSUES

**지역인구정책의 패러다임
정주인구에서 생활인구로 확대**

REPORT

**경남 인구특성을 고려한
생활인구 유인전략**

ISSUES



C O N T E N T S

지역인구정책의 패러다임

정주인구에서 생활인구로 확대

정연우 연구위원

김소연 주임연구원

 생활인구의 도입 배경과 정의

 생활인구 산정결과(24년 1~2분기)

 생활인구 개념의 적용

지역인구정책의 패러다임 정주인구에서 생활인구로 확대

정연우 연구위원, 김소연 주임연구원

▣ 생활인구의 도입 배경과 정의

◎ 도입 배경

- 생활인구는 정주인구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체류(통근, 통학, 관광 등)하며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국가 총인구 감소, 지역 간 인구유치 경쟁 상황 극복을 위해 도입

◎ 생활인구 정의

-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면 생활인구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
 -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 통근·통학·관광 등의 목적으로 주민등록지 이외의 지역을 방문하여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 생활인구 산정결과('24년 1~2분기)

◎ 민관데이터를 통한 생활인구 산정

- 2024년 7월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은 민관데이터를 활용해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24년 1분기 생활인구를 산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2024.7.25.)

자료명	입수 항목	기준시점
주민등록자료(행안부)	인구정보(연령, 성별, 등록지역 등)	'24.1월~3월
외국인등록자료(법무부)	인구정보(연령, 성별, 등록지역 등)	
통신 모바일 자료	체류정보(체류지역, 체류시간 등)	

- 2024년 10월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은 89개 전체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24년 2분기 생활인구를 산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2024.10.30.)
 - 기존 데이터에 카드사의 지역별 카드사용 정보와 신용정보사의 직장 정보 등을 추가적으로 결합하여 보다 입체적으로 체류인구의 특성을 분석

출처	수집 데이터	활용 목적	기준시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외국인등록인구	기본 인구 자료 분석	
법무부	외국인 체류 및 거소신고 데이터	외국인 인구 자료 분석	매월 말일
KCB	직업정보	체류목적 분석	최근 신고일
통신사(SKT, KT, LGU+)	휴대폰 기지국 위치 데이터	체류인구 및 이동패턴 분석	
카드사(신한, 삼성, BC, 하나)	카드 결제 내역	지역별 소비 활동 분석	매월 1일~말일

◎ 생활인구 산정 결과

- 24년 6월 인구감소지역 전체 생활인구는 약 2,850만명으로 1분기 대비 약 350만명 증가
- 시·도별 생활인구의 경우, 광역시 내 인구감소지역이 535만명으로 가장 크고, 체류인구 배수는 강원이 7.9로 가장 크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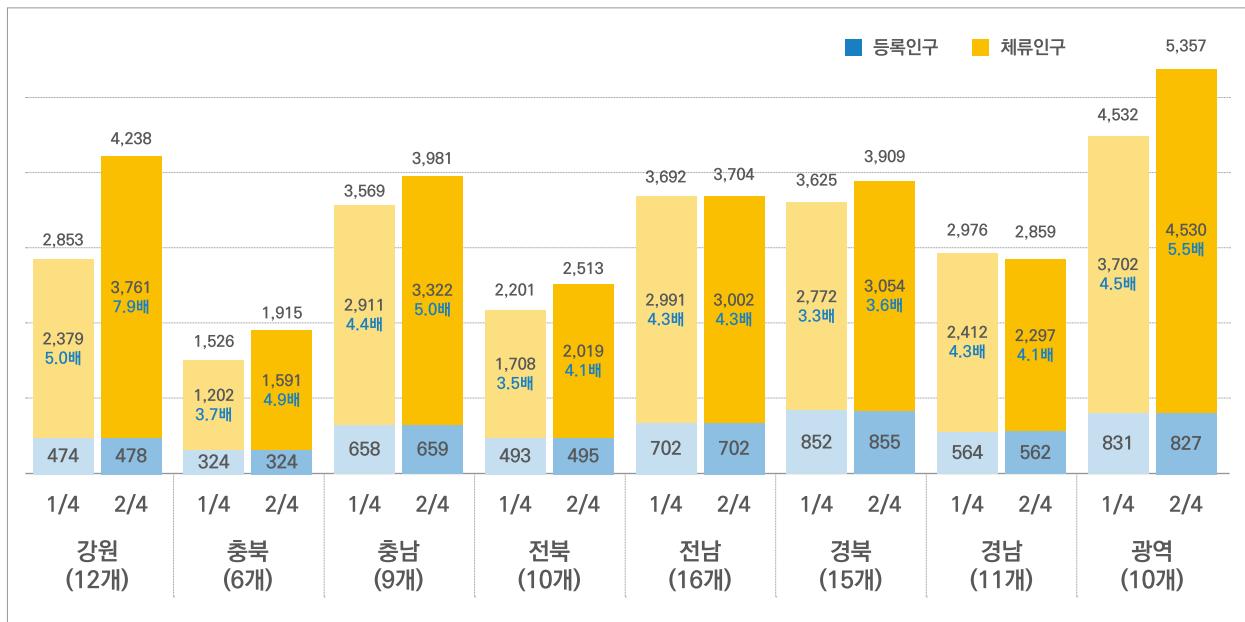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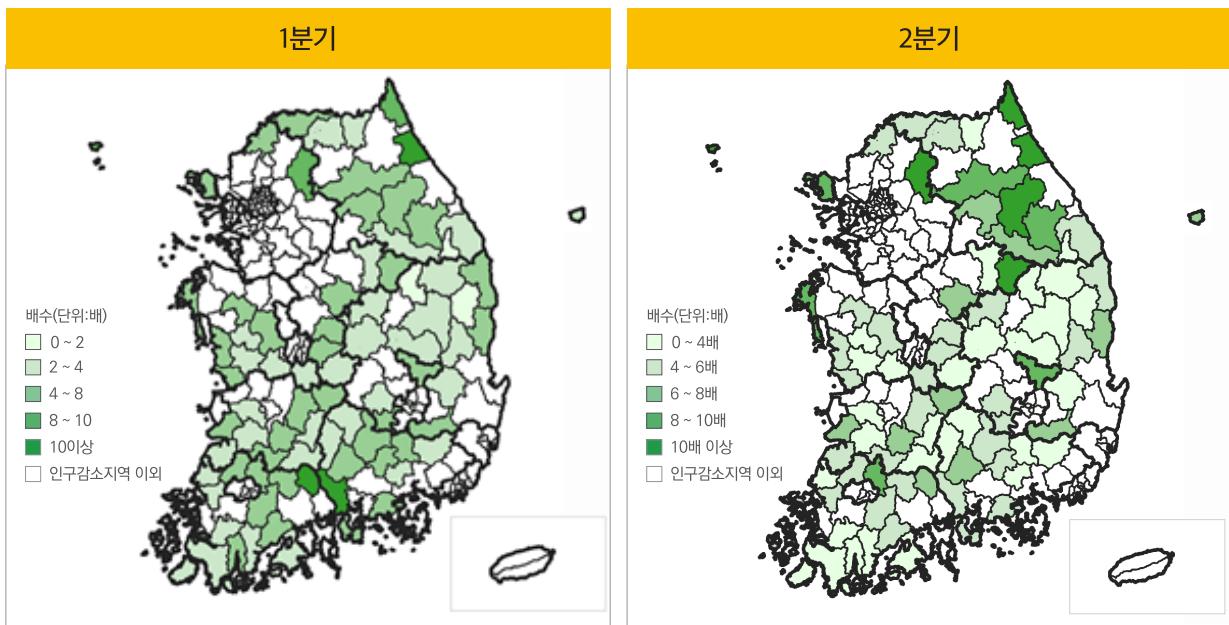


그림-1 '24년 1~2분기 시도별 생활인구 규모 (단위: 천명)

- 시군구별 생활인구의 경우, 모든 인구감소지역에서 등록인구보다 체류인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구례군은 체류인구가 등록인구의 18.4배로 매우 높은데, 이는 '24년 3월 산수유 축제가 있었던 영향으로 보여짐



◎ 시·도별 주요 지역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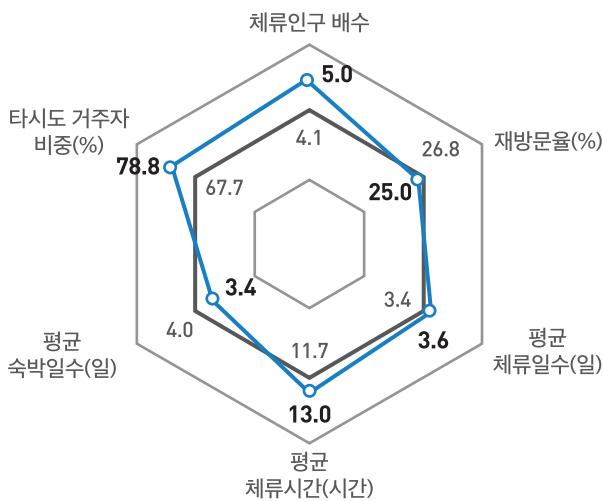
- 지역특성항목은 지역의 활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24년 2분기부터 카드사 데이터가 통합되면서 8개 항목으로 구분

지역특성항목	설명
①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배수	체류인구를 등록인구로 나눈 값
② 타시도 거주자 비율	체류인구 중 체류지역의 시도와 등록지역 시도가 다른 체류인구의 비율
③ 재방문율	해당 월의 체류인구 중 이전 기간에 체류 이력이 있는 사람의 비율
④ 평균 체류일수	체류인구가 한 달 동안 체류지역에 체류한 평균 일수
⑤ 평균 숙박일수	체류지역에 숙박한 체류인구에 대해 한 달 동안 숙박한 평균 일수
⑥ 평균 체류시간	체류인구가 한 달 동안 체류지역에 체류한 시간의 합을 체류한 일수의 합으로 나눈 값
⑦ 인당 평균 카드 사용액	해당 시군구에서 체류인구가 사용한 금액을 카드 사용자의 수로 나눈 값
⑧ 체류인구 카드 사용액 비중	전체 카드 사용액(체류인구 카드 사용액 + 등록인구 카드 사용액) 중 체류인구 카드 사용액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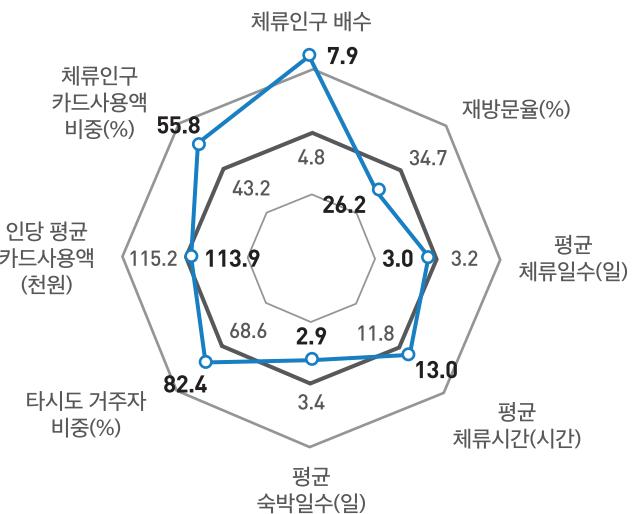
- 8개 지역특성항목을 타 시·도와 비교하여 해당 인구감소지역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체류인구 유입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기대
 - 예를 들어, 강원은 1분기에 6개 특성 중 4개 특성이 평균 이상이고, 2분기에는 8개 특성 중 5개 항목이 평균 이상으로서 활력도는 양호하나, 재방문율과 평균 숙박일수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경남은 1분기 6개 특성 중 1개 항목이 평균을 넘었으며, 2분기 8개 특성 중 4개 항목이 평균 이상으로 나타나 지역의 활력도가 1분기에 비해 다소 높아진 것으로 확인됨

강원특별자치도(12개 시군구)

1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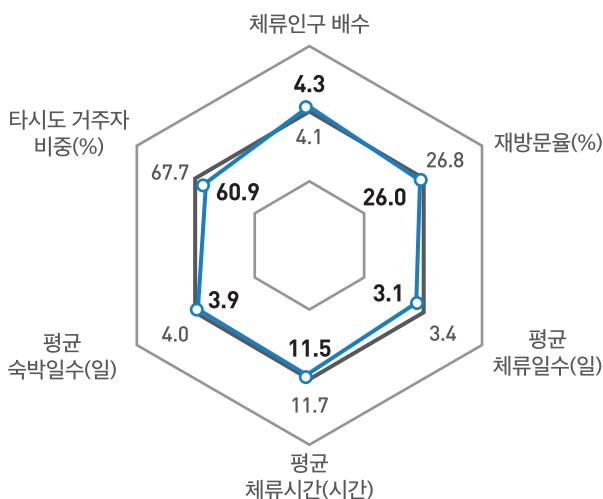


2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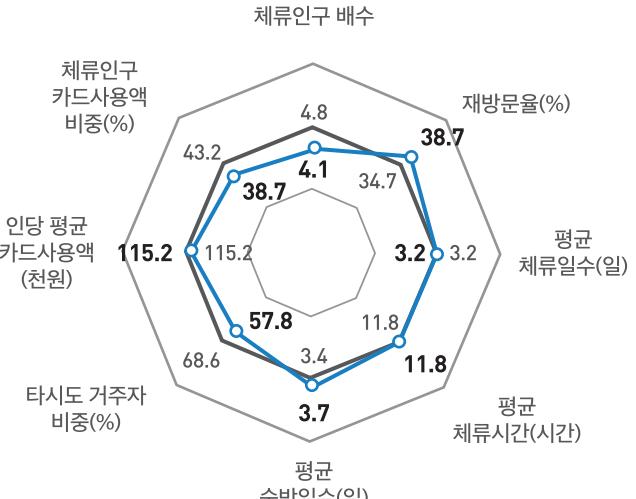


경상남도(11개 시군구)

1분기



2분기



생활인구 개념의 적용

◎ 2040년 세종시 도시기본계획

- 2040년 세종시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인구지표’ 설정 부문에서 보다 적극적인 지역인구유입 전략의 일환으로 생활인구 전략 필요성 언급
- 구체적으로 향후 객관적인 통계자료 및 정성적 분석자료 제공시 이를 반영한 지역특성과 실정에 맞는 계획수립이 필요함을 강조
- 기존의 정주인구 기반으로 적용되고 있는 계획인구, 도시계획시설 설치기준, 생활SOC 설치기준에 생활인구를 고려
- 도시기본계획 및 생활권계획 수립시 생활인구를 고려한 이슈 도출로 정책변화에 선제적 대응

◎ 거창군 “생활인구 100만명 달성 로드맵” 수립

- 거창군은 생활인구 개념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자 2024년 11월 ‘생활인구 100만명 달성 로드맵’을 마련함으로써 관광, 귀농귀촌, 생활SOC확충 전략을 제시하며 인구소멸 대응 정책으로 활용
- 행안부 생활인구 집계 산정자료 분석 결과, 정주인구는 강세이나 체류인구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중장기 생활인구 유치계획 수립
- 로드맵은 ‘소멸에서 활력으로, 상승가도 미래거창’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3대 전략·6대 부문·2대 추가 수요 분야로 구성하고, 총 62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

전략	중점 추진과제	목표(2030)
지역관광 활성화 (26개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계절 체류형 관광 인프라 확충: 산림레포츠파크 준공, 감악산·창포원·수승대 등 명소 인프라 정비· 문화예술 콘텐츠 확대: 연극예술복합단지, 거창 아트갤러리 조성	월 82만 명 생활인구 유입
군민 건강과 지역활력 제고 (9개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거점형 의료복지타운 조성, 공립치매요양시설 건립, 생활체육시설 조성· 전국 단위 체육대회 유치 추진	월 2만 7,000명 생활인구 유입
지역거점 활성화 (14개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맞춤형 주거지원: 청년·귀농 임대주택, 지역활력타운 조성· 일자리 창출: 첨단산업단지, 승강기 허브도시 육성· 교육환경 개선: 학령기 교육 인프라 확충	월 1만 4,000명 생활인구 유입
교통인프라 확충 및 읍면특화 행사 축제 개발 (13개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 연계 교통망 강화: 함양~울산고속도로, 진천~합천고속도로, 달빛내륙철도, 남부내륙철도 등· 읍면 특화 테마축제 및 행사 개발	월 13만 9,000명 생활인구 유입

◎ 시사점

- 생활인구는 기존 통계의 한계를 보완함으로써 정책 기획에 필요한 정량적 지표로 활용 기대
- 특히, 8개 지역특성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타 지자체와 비교가 가능해지면서 각 시·군의 인구감소대응 전략 수립 및 지역특화 맞춤형 사업 발굴에 활용이 기대
- 나아가, 민간 데이터와 공공 데이터의 융합, 시계열 누적 분석 등이 병행된다면 정교한 맞춤형 정책 설계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

REPORT



CONTENTS

경남 인구특성을 고려한 생활인구 유인전략

정연우 연구위원(연구책임)

성장환 선임연구위원, 이상현 수석연구원, 김소연 주임연구원

-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이동 특성 분석
- 정부 및 지자체의 인구감소대응 정책 고찰
- 생활인구 개념 정립 및 경남지역 생활인구 분석
- 지역활성화 사업현황 및 생활인구 유인전략

인구감소 # 생활인구 # 지역활성화 # 추진전략

Summary

우리나라는 인구의 자연감소와 고령화, 수도권 중심의 인구집중 등 인구문제의 심각성이 날로 증대하고 있으며,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의 위기에서 나아가 지방소멸론까지 거론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정주인구 유인정책만으로 지방의 인구유입과 활력을 제고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비정주인구 유인을 통한 지역활성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이에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생활인구의 개념을 구체화한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시행하였으며(2023.5), ‘제1차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을 확정하였음(2023.12).

그간 다양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해 온 LH도 최근의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정부 주도의 계획이 적극적으로 수립·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역발전사업을 모색할 시기임.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이동 특성을 분석하고, 최근 정부와 지자체의 인구감소대응 및 유인정책에 대해 살펴본 후,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생활인구를 분석하고 이를 유인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였음.

경남 인구특성을 고려한 생활인구 유인전략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이동 특성 분석

◎ 인구구조 변화

- 최근 10년(2014~2023) 동안 전국의 총인구는 0.8% 증가한 반면, 경남의 총인구는 2% 감소(2018년 이후부터 감소 추세)
- 2023년 기준 경남의 총인구는 3,255천여 명이며, 총인구 대비 영유아인구(만 0~5세)는 3.2%, 청년인구(만 19~34세)는 16.3%, 노인인구(만 65세 이상)는 20.1% 차지
- 경남의 인구감소는 출산율의 감소와 지속적인 인구 순유출이 주요 원인으로 보이며, 합계출산율은 2014년 1.41명에서 2023년에는 0.8명으로 계속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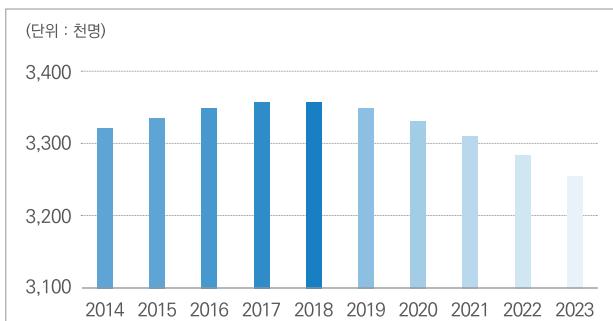


그림-1 경상남도 총인구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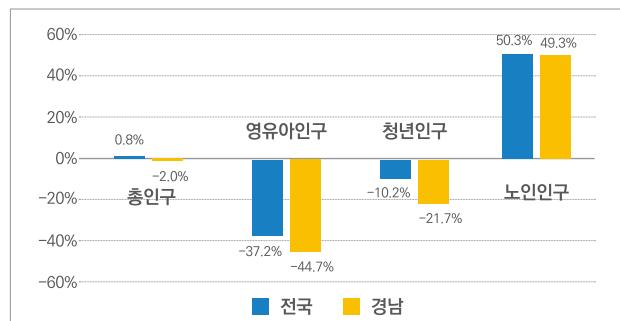


그림-2 대상별 인구 증감률(2014년 대비 2023년)

◎ 인구이동 특성

- 경남의 순이동(전입-전출)을 살펴보면, 순유입이 지속적으로 감속하다가 2018년부터 인구유출이 시작되어 2023년에는 16,300명이 유출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청년층의 순유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20~29세의 인구유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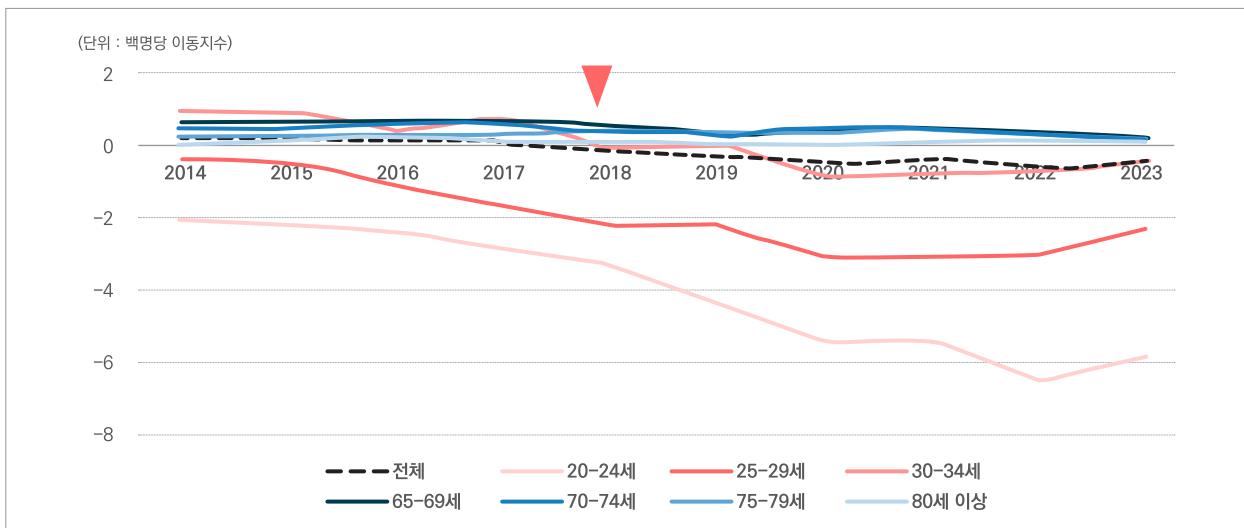


그림-3 경남 연령별 순이동 변화

정부 및 지자체의 인구감소대응 정책 고찰

표-1 중앙정부 및 경상남도의 생활인구 관련 정책

구분	상위계획	전략	추진방안 및 과제	
중앙정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2023~2027)	생활인구 늘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인구산정 • 정주여건 개선 • 지역관광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활력 • 청년 농어업인의 육성 • 특별위원회 구성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생활인구 유입 및 활성화 도모	생활인구제도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인구 산정·분석 • 생활인구 활성화 • 관계인구(가칭)도입 및 연계
			지역 이주 및 체류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장년인구 유입 촉진 • 농어촌 방문·체류 활성화 •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지역문화관광자원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주 오래 머무는 지역 • 지역특화 관광상품 개발
			지역 맞춤형 외국인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특화 비자발급 유연화 • 일손해결형 외국인력 유치
경상남도	2022-2026 경상남도 인구감소 지역대응 기본계획	생활인구 확대를 통한 인구활력 증진	체류주민 확보를 통 한 생활인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남 청년보금자리 조성사업 • 워케이션 1번지 조성사업 • 스마트 섬마을 워케이션 조성사업 • 일과 휴가를 동시에 '경남형 워케이션 플랫폼' 구축 • 귀농현장닥터 운영지원 • 청년 이주정책 지원 사업 • 살고싶은 섬 가꾸기 사업 •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작지만 강한 연결- 체류 관광객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남 숙박시설을 누구나 할인가에 누리는 '경남회원권' • 머물터 조성사업 • 경남 "매력 up" 지원사업 • 황매산 녹색문화 체험지구 조성 • 체류형 어촌체험기반 조성 시범사업 • 지역관광자원과 연계한 예술인창작마을 조성 • 아시아 유소년 축구 트레이닝 센터 설립, 운영 • 교통약자 BF 여행지 조성 • 호텔형 키즈 프로그램 지원사업 • 경상남도 마을여행 지원사업 • 국립지리산산림치유원 조성 • 남해대교 관광자원화 •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사업 •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지역특화형 외국인 근로자 유입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유학생 교육-고용-정주 원스톱지원 • 아시아청년 대상 농업경영 혁신프로그램 운영 •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정책지원사업
			더불어 잘사는 지역 공동체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눔주택 사업 • 마을기업 육성사업 • 마을기업 컨설팅 등 지원사업 •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역특화사업

생활인구 개념 정립 및 경남지역 생활인구 분석

◎ 생활인구 개념 정립

- 생활인구는 국가 총인구 감소 상황에서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교통·통신이 발달함에 따라 이동성과 활동성이 증가하는 생활유형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

표-2

구분	생활인구 기준	생활인구 산정 대상 및 내용
관련법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 및 관련 법령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통근·통학·관광 등의 목적으로 주민등록지 이외의 지역을 방문하여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인구 산정 대상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이며, 산정 주기는 월 단위로 함• 산정 내용은 성별, 연령대별, 체류일수별, 내·외국인별 생활 인구로 구분

◎ 경남지역 생활인구 분석

- 본 연구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생활인구 산정방법을 최대한 준용하여 경남지역의 생활인구 (주민등록인구+등록외국인+체류인구)를 산정
 - 주민등록인구 대푯값은 매월 발표되는 주민등록인구를 합산 후 12개월로 나누어 산정하였으며, 등록외국인은 분기별로 발표되고 있어 합산 후 4로 나누어 대푯값을 도출
 - 체류인구(직장인구, 방문인구)는 월 단위로 집계된 시간대별 주중·주말 체류인구를 합산 후, 이 값을 24시간×2(주중·주말)×12개월로 나누어 대푯값을 산정
- 2022년 기준, 경남 전체 시군구의 생활인구는 4,314,712명으로 주민등록인구 대비 생활인구 비는 1.31이며, 체류인구 중 방문인구가 직장인구에 비해 2.74배 높게 나타남
 - 체류인구 특성을 살펴보면, 직장인구는 주중이 주말에 비해 약 1.97배 많고, 방문인구는 주말이 주중 대비 1.25배 많음
 - 시간별-연령별 특성을 살펴보면, 체류인구가 가장 많은 시간대는 12시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는 40~49세, 50~59세, 30~39세 순으로 체류인구가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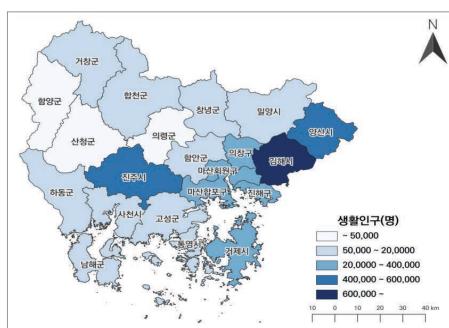


그림-4 시군구별 생활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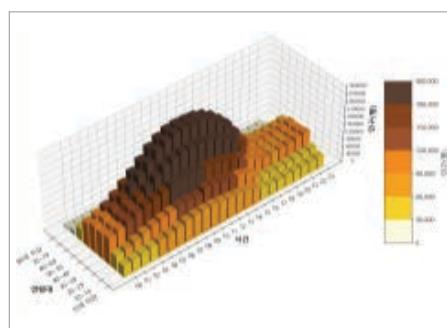


그림-5 시간별-연령별 체류인구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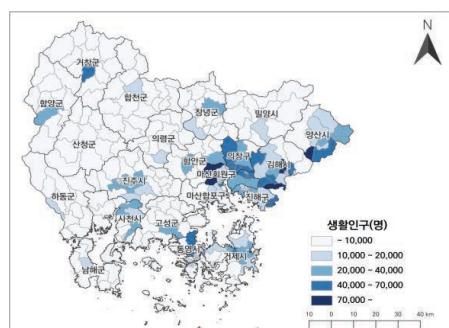


그림-6 읍면동별 생활인구

지역활성화 사업현황 및 생활인구 유인전략

◎ 지역활성화 관련 사업현황

- 생활인구 유인을 위한 전략 도출을 위해 중앙정부 균형발전사업, 지역개발사업, 지자체 인구감소 대응사업 등 지역활성화 사업을 종합적으로 살펴봄
 - 이러한 지역활성화 사업은 내용에 따라 기반시설 공급 및 확충, 정주환경 개선, 고용·교육 증대, 문화·관광 육성, 산업육성 등 유형으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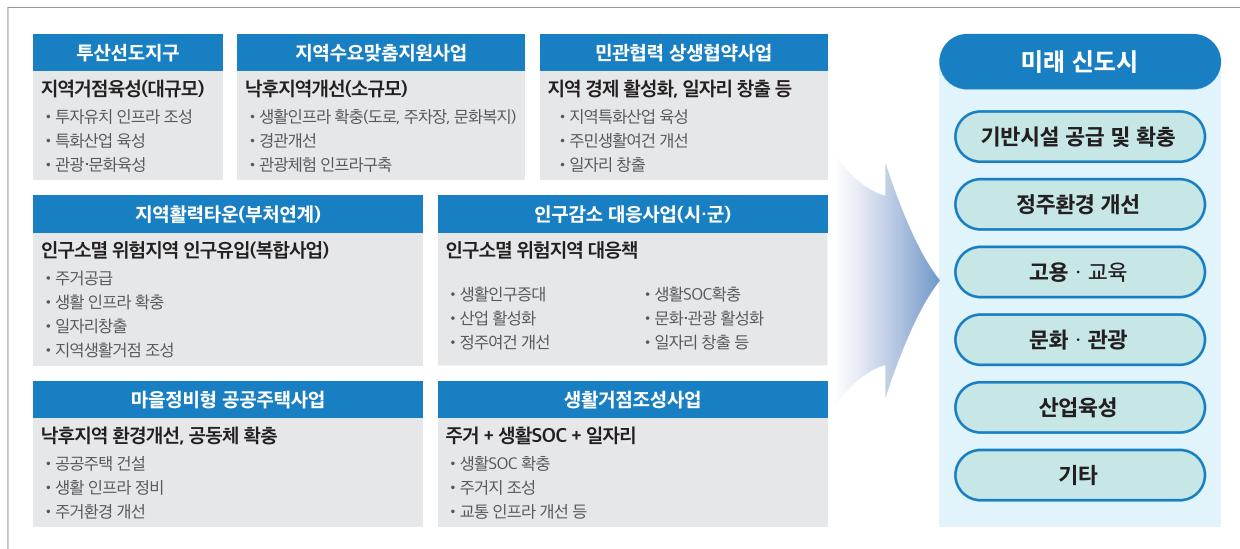


그림-7 지역활성화 관련 사업유형

◎ 생활인구 유인을 위한 추진전략 제시 및 적용

- 지역여건을 고려한 공간유형별 추진전략 검토를 위해 인구특성(생활인구), 지역특성, 개발정도에 따라 공간유형을 구분한 결과 총 12개의 유형으로 구분
 - 12개의 공간유형을 다시 인구특성과 지역특성을 위주로 유사한 특성을 가진 5가지 그룹으로 묶고, 공간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생활인구 유인전략을 제시

표-3 공간유형별 생활인구 유인전략

공간특성	해당 공간유형	생활인구 유인전략
인구가 많고, 지역특성 양호	유형 1, 2, 3	기존 인프라 활용 첨단산업 및 문화관광 자원의 수준을 지속 유지하고, 이를 최대로 활용 및 지원하기 위한 S/W 발굴
인구가 많고, 지역특성 보통	유형 4, 5	생활인구의 지속적 유입을 위해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확충하고, 개발정도에 따라 SW 또는 문화·관광, 산업육성, 고용·교육 관련 H/W를 선택하여 적용
인구는 적지만, 지역특성 양호	유형 6, 7, 8	생활인구 유출 대비 및 유입 증대를 위해 정주환경 개선이 우선적이며 개발 정도에 따라 SW 또는 문화·관광, 산업육성, 고용·교육 관련 H/W를 선택적으로 적용
인구가 적고, 지역특성 보통	유형 9, 10, 11	생활인구 유출 대비 및 유입 증대를 위한 정주환경 개선과 생활 SOC의 확충·정비가 중요한 유형으로, 개발 정도에 따라 문화·관광, 교육·고용, 산업 육성 관련 H/W를 선택적으로 적용
인구, 지역특성, 개발정도 최하위	유형 12	중장기적인 발전 가능성 평가 후 단계적 지원정책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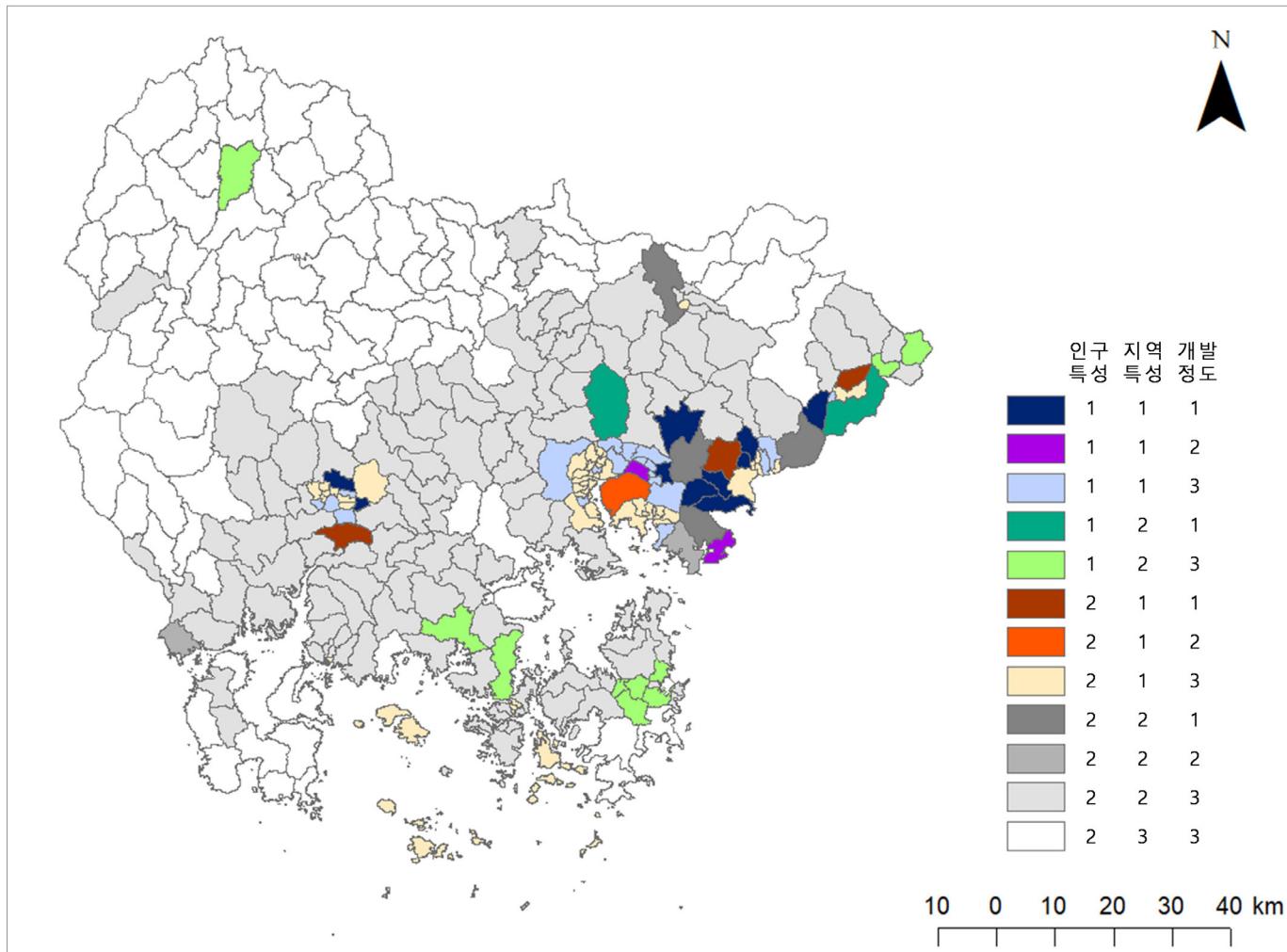


그림-8 인구특성과 지역여건에 따른 공간유형

- 앞서 제시한 공간유형별 생활인구 유인전략과 연계하여 적용가능한 사업유형을 검토하고 이의 적용방안을 모색

표-4 공간유형별 적용가능한 사업유형

공간 유형	군집유형			공간특성	사업유형
	인구 특성	지역 특성	개발 정도		
1	1	1	1	인구가 많고, 지역특성 양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W 사업 : 지역 공공행정 서비스 강화, 교육 및 창업 지원 프로그램, 상권웹 구축,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
2	1	1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관광 육성 : 테마파크, 특화공원
3	1	1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육성 : 거점특화단지(제조, 농업 등) 조성, R&D 단지 조성, 노후산단 정비 • SW 사업 : 지역 공공행정 서비스 강화, 교육 및 창업 지원 프로그램, 상권웹 구축,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
4	1	2	1	인구가 많고, 지역특성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반시설 확충 : 복합환승플랫폼, 역 증개축 • SW 사업 : 지역 공공행정 서비스 강화, 교육 및 창업 지원 프로그램, 상권웹 구축,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반시설 확충 : 지방도로 정비, 생활 SOC(체육, 문화, 돌봄 등) 확충 및 정비, 지역활력타운 조성 • 문화·관광 육성 : 스마트 관광단지, 웰니스 관광단지, 문화체험장 조성
5	1	2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육성 : 식품산업 농공단지(스마트팜), 로컬 food 마켓, 웰니스 융복합(바이오) 산단, 농식품 물류센터 • 고용·교육 증대 : 청년창업지원센터 건립, 워케이션지원센터 건립, 귀농·귀촌 지원센터 건립, 로컬(마을)대학 조성, 어린이집 건립 • SW 사업 : 귀농·귀촌 지원 프로그램, 건강케어시스템 구축, 교육 및 창업 지원 프로그램 제공, 상권웹 구축,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구축, 작은학교 살리기, 온라인 학습지원 시스템 구축, 체험관광 순환버스 운행,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

공간 유형	군집유형			공간특성	사업유형
	인구 특성	지역 특성	개발 정도		
6	2	1	1	인구는 적지만, 지역특성 양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주환경 개선 : 빈집 리모델링, 노후주택 정비 • 문화·관광 육성 : 관광체험 인프라 구축, 경관개선, 먹거리 타운 정비,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 캠핑장 조성, 생태공원 조성, 웰니스 관광 • 고용·교육 증대 : 청년창업지원센터, 워케이션지원센터, 귀농지원센터 건립, 로컬(마을)대학 조성, 어린이집 건립 • SW 사업 : 귀농·귀촌 지원 프로그램, 건강케어시스템 구축, 교육 및 창업 지원 프로그램 제공, 상권웹 구축,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구축, 작은학교 살리기, 온라인 학습지원 시스템 구축, 체험관광 순환버스 운행,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
7	2	1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주환경 개선 : 빈집 리모델링, 노후주택 정비 • 문화·관광 육성 : 관광체험 인프라 구축, 경관개선, 먹거리 타운 정비,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 캠핑장 조성, 생태공원 조성, 웰니스 관광 • 산업육성 : 식품산업 농공단지(스마트팜), 로컬 food 마켓, 웰니스 융복합(바이오) 산단 • 고용·교육 증대 : 청년창업지원센터, 워케이션지원센터, 귀농지원센터, 로컬(마을)대학 조성, 어린이집 조성 • SW 사업 : 귀농·귀촌 지원 프로그램, 건강케어시스템 구축, 교육 및 창업 지원 프로그램 제공, 상권웹 구축,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구축, 작은학교 살리기, 온라인 학습지원 시스템 구축, 체험관광 순환버스 운행,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
8	2	1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주환경 개선 : 특화형 공공주택공급(청년특화형, 고령자형, 일자리연계형, 지역제안형), 빈집 리모델링, 노후주택 정비, 유휴시설 활용 주거단지 조성 등 • 기반시설 확충 : 지방도로 정비, 생활 SOC(체육, 문화, 돌봄 등) 확충 및 정비, 지역활력타운 조성 • 문화·관광 육성 : 관광체험 인프라 구축, 경관개선, 먹거리 타운 정비,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 캠핑장 조성, 생태공원 조성, 웰니스 관광 • 고용·교육 증대 : 청년창업지원센터, 워케이션지원센터, 귀농지원센터, 로컬(마을)대학 조성, 어린이집 조성 • SW 사업 : 귀농·귀촌 지원 프로그램, 건강케어시스템 구축, 교육 및 창업 지원 프로그램 제공, 상권웹 구축,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구축, 작은학교 살리기, 온라인 학습지원 시스템 구축, 체험관광 순환버스 운행,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
9	2	2	1	인구가 적고, 지역특성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주환경 개선 : 특화형 공공주택공급(청년특화형, 고령자형, 일자리연계형, 지역제안형), 빈집 리모델링, 노후주택 정비, 유휴시설 활용 주거단지 조성 등 • 기반시설 확충 : 지방도로 정비, 생활 SOC(체육, 문화, 돌봄 등) 확충 및 정비, 지역활력타운 조성 • 문화·관광 육성 : 관광체험 인프라 구축, 경관개선, 먹거리 타운 정비,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 캠핑장 조성, 생태공원 조성, 웰니스 관광 • 산업육성 : 식품산업 농공단지(스마트팜), 로컬 food 마켓, 웰니스 융복합(바이오) 산단 • 고용·교육 증대 : 청년창업지원센터, 워케이션지원센터, 귀농지원센터, 로컬(마을)대학 조성, 어린이집 조성 • SW 사업 : 귀농·귀촌 지원 프로그램, 건강케어시스템 구축, 교육 및 창업 지원 프로그램 제공, 상권웹 구축,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구축, 작은학교 살리기, 온라인 학습지원 시스템 구축, 체험관광 순환버스 운행,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
10	2	2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주환경 개선 : 특화형 공공주택공급(청년특화형, 고령자형, 일자리연계형, 지역제안형), 빈집 리모델링, 노후주택 정비, 유휴시설 활용 주거단지 조성 등 • 기반시설 확충 : 지방도로 정비, 생활 SOC(체육, 문화, 돌봄 등) 확충 및 정비, 지역활력타운 조성 • 문화·관광 육성 : 관광체험 인프라 구축, 경관개선, 먹거리 타운 정비,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 캠핑장 조성, 생태공원 조성, 웰니스 관광 • 산업육성 : 식품산업 농공단지(스마트팜), 로컬 food 마켓, 웰니스 융복합(바이오) 산단 • 고용·교육 증대 : 청년창업지원센터, 워케이션지원센터, 귀농지원센터, 로컬(마을)대학 조성, 어린이집 조성 • SW 사업 : 귀농·귀촌 지원 프로그램, 건강케어시스템 구축, 교육 및 창업 지원 프로그램 제공, 상권웹 구축,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구축, 작은학교 살리기, 온라인 학습지원 시스템 구축, 체험관광 순환버스 운행,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
11	2	2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주환경 개선 : 특화형 공공주택공급(청년특화형, 고령자형, 일자리연계형, 지역제안형), 빈집 리모델링, 노후주택 정비, 유휴시설 활용 주거단지 조성 등 • 기반시설 확충 : 지방도로 정비, 생활 SOC(체육, 문화, 돌봄 등) 확충 및 정비, 지역활력타운 조성 • 문화·관광 육성 : 관광체험 인프라 구축, 경관개선, 먹거리 타운 정비,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 캠핑장 조성, 생태공원 조성, 웰니스 관광 • 산업육성 : 식품산업 농공단지(스마트팜), 로컬 food 마켓, 웰니스 융복합(바이오) 산단 • 고용·교육 증대 : 청년창업지원센터, 워케이션지원센터, 귀농지원센터, 로컬(마을)대학 조성, 어린이집 조성 • SW 사업 : 귀농·귀촌 지원 프로그램, 건강케어시스템 구축, 교육 및 창업 지원 프로그램 제공, 상권웹 구축,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구축, 작은학교 살리기, 온라인 학습지원 시스템 구축, 체험관광 순환버스 운행,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
12	2	3	3	인구, 지역특성, 개발정도 최하위	모든 측면에서 여건이 열악하여 지역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지역으로 중장기적인 발전 가능성 평가 후 단계적 지원정책 수립

- 마지막으로 앞서 제시한 공간유형별 적용가능한 사업유형을 사례지역에 적용
 - 예를 들어, 공간유형 5에 해당하는 인구가 많고 지역특성이 보통인 사례지역에 대한 사업유형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음

표-5 공간유형별 사업유형 적용 안

인구특성		지역특성		개발정도		유형 5: 인구가 많고 지역특성 보통
생활인구	: 29,115	토지이용 압축도	: 5.77	사업체수(개)	: 6,792	
주민등록인구	: 23,700	토지이용 복합도	: 5.22	도시 및 택지개발 면적(m ²)	: 75,805.2	
외국인 인구	: 356	노인복지 접근성(m)	: 52.63	산업단지 면적(m ²)	: 876,110	
체류인구	: 5,100	문화체육 접근성(m)	: 25.52			
직장	: 1,444	교육 접근성(m)	: 23.58			
방문	: 3,656	의료 접근성(m)	: 41.03			
주민등록인구 대비 생활인구 : 1.23		국토인프라 접근성(m)		65.39		

기초지자체 생활인구 유인 사업	기타 관련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관광) 자연관광만 구축 (기반시설) 스포츠 빌리지 조성, 고성 종합 사회복지관 (정주+고용) 고성형 근로자 주택 건립사업,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육성) 무학마을 마을기업 조직 육성, 무학마을 콘텐츠 발굴, 무학마을 플랫폼 조성 (기반시설) 커뮤니티센터 및 청년타운 조성, 골목 플랫폼 및 마을정원 조성, 공동체 활성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당 일반산업단지

적용 가능 사업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육성: 식품산업 농공단지(스마트팜) 기반시설 확충: 지역활력타운, 생활 SOC 확충 및 정비, 지방도로 정비 고용·교육 증대: 워케이션지원센터, 로컬(마을)대학 조성



본 자료는 토지주택연구원에서 2024년 정기과제로 수행한 “경남 인구특성을 고려한 생활인구 유인전략” 과제의 성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공사나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공사의 승인없이 연구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정연우(PM) 국토공간연구실 연구위원(ywjeong@lh.or.kr)

이상현 국토공간연구실 수석연구원(urbgis@lh.or.kr)

발행처 LH 토지주택연구원

성장환 국토공간연구실 선임연구위원(plan21@lh.or.kr)

김소연 국토공간연구실 주임연구원(nuoyos@lh.or.kr)

